

## 농진청 '기능분리 추진' 논란

농촌진흥청이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가 농진청의 고유 업무인 연구관리 기능을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제3의 독립기구로 이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농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은 각종 영농기술을 전수받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부 주도로 최근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어업분야 연구개발(R&D) 효율화 방안' 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8일 개최한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조직개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중심으로 연구관리 기능 개편의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논란에 불지피는 정부 =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진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 방침을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야기했다. 그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선진화위원회가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분과회의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연구관리 기능을 빼내는 내용이 담긴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을 중점 논의과제로 채택했다.

이 안에는 전체 R&D 사업의 연구관리 일원화와 R&D 사업 관리통합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두가지 개편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시기가 문제일 뿐 과제수행자선정·과제집행·성과평가 등의 농진청 연구관리 기능은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기구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

농진청이 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설립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연구관리 기능마저 잃게 될 경우 반쪽짜리 중앙행정기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 6월 8일 토론회에서 김동수 경성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연구관리 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넘어가면 이 기관은 수익성 높은 연구수행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 대신 돈 되는 연구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주학운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대학 교수는 "농업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기반산업이고, 농업 R&D는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농업 R&D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임무를 민간에 넘겨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에서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민영화된 기관이 경쟁과 효율성을 내세울 경우 최소한의 공공성이 무너져 농림어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민영화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생명과학 등 경쟁조직이 있는 부분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선용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은 "공무원조직이 가진 폐쇄적이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치유할 대안으로 농림수산업 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인가 = 우선 정부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과 농업 R&D의 특성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농림수산물 분야 R&D는 정부 주도 비율이 66.8%로 다른 나라 평균(10.5%)보다 6배 이상 높다. 이를 두고 '민간 R&D 비율이 너무 낮아 문제'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지만, 이는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달려

들지 않고, 그래서 국가기관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관리 기능이 이관되면 품종개발 등 기초연구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지금처럼 농진청에서 개발한 종자나 기술을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공급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농업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조사료 생산량 급증 ... 파동 조심

청보리 등 조사료 작물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대다수 지역에서 판로난을 겪는 등 조사료 파동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한시적이지만 올봄 생산된 조사료만이라도 소비가 늘도록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조사료 정책방향도 수급상황을 파악, 적정량이 재배·유통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배합사료 위주의 가축사육이 축산물 생산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지난 1998년부터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작물 재배와 사용을 적극 장려, 해마다 기계장비 구입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은 ▲2005년 14만 1,000ha ▲2008년 19만3,000ha ▲오는 2012년은 37만 ha로 확대, 현재 70% 선인 조사료 자급률을 90%로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가을 농가들이 한꺼번에 청보리 등 조사료 작물 재배에 나선 결과 올해는 지난 5월 수확을 마친 동계 조사료 작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정도로 늘어난 상태. 전남지역의 경우 청보리

등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이 지난해는 8,621ha였으나 올해는 영광·장흥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 대비 121%나 많은 1만9,034ha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역시 당초엔 올봄 1만5,000ha에서 청보리 등을 수확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수확을 마친 결과 계획보다 20% 이상 많은 1만8,080ha에서 조사료 작물을 생산한 상태다.

축산업계에선 강원·경북·충북 등 조사료 재배가 이뤄지지 않던 지역에서도 재배가 성행한데다 지난해 가을 벼농사 풍작에 따른 볏짚 재고량까지 많이 남아 자칫 조사료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늘자 판로를 찾지 못한 조사료 덩어리(곤포사일리지)가 논가에 그대로 방치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한 농가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전북 김제지역에서 청보리 유통을 맡은 이순근씨(53)는 "정부에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청보리 재배를 권장, 물량이 채워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산량이 많다보니 팔리지 않아 논에 쌓아둔 곤포사일리지 때문에 모내기를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축산 관계자들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축산담당 공무원은 "정부의 조사료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면 조사료 생산기반 약화 → 조사료 자급률 저하 → 조사료 및 사료곡물 수입 증가 → 축산물 생산비 증가 → 축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조사료 수매에 나서거나 유통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도환 전남도 축정과 조사료 담당은 "조사료 곤포 한 개당 중량이 무려 600kg씩 나가 소규모 사육농가는 사용할 수 없어 포장 단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 농업-축산경제 통합 '중격'**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을 요구하는 범축산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실무초안에는 오는 2012년부터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는 안이 담겨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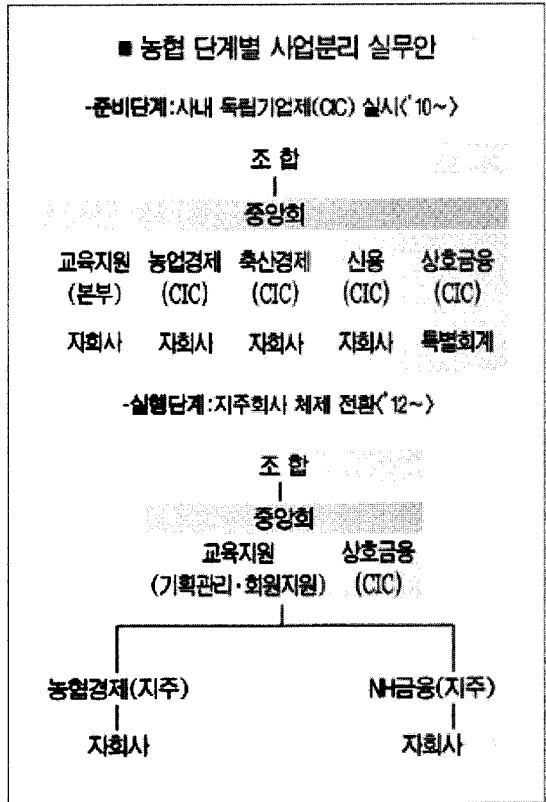
농협은 이 안을 놓고 7월과 8월 중 전국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그 여론을 농협안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협의 실무초안을 토대로 농식품부의 실무초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획대로 금년안으로 농협 사업개편안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농협이 마련한 실무초안에 따르면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눠 준비단계에서는 사내 독립기업제(CIC)를 오는 2010년부터 2011까지 실시한 이후 실행단계인 2012년부터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내 독립기업제 기간인 2년동안 중앙회를 1본부(교육지원본부) 4개(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상호금융) 사내 독립기업제로 개편, 인사 및 회계분리로 순환배치를 금지하고 급여체계도 차별화하면서 독립회계를 한다는 것. 또 자본분리와 자금 차단벽을 설치하고, 자본 확충은 조합(우선출자, 자본증권) 및 정부 지원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012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합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고, 신용부문은 NH금융지주회사로 하며, 자본배분은 경제지주에 우선적이고 충분히 배분하되 부족자본금은 내부(정부)에서 최대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중앙회내 별도 독립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물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자율적으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농협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늦어도 오는 11월 중으로는 농식품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농협의 실무초안이기는 하지만 축산경제가 농업경제와 통합하는 안이 나왔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